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민들은 '잘 몰라요'

재활용 효율성 위해 의무화 불구
라벨 안 떼고 마구잡이 배출 여전
광주지역 아파트 홍보 제대로 안돼
대부분 전용 수거공간 마련 안해
내년 6월까지 제도 후 과태료 부과

- 올바른 분리배출 이렇게**
- ① 페트병 속을 가볍게 씻어낸 뒤
 - ② 걸 라벨을 없애고
 - ③ 찌그러뜨린 뒤
 - ④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채워서
 - ⑤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한다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해당 공간에는 라벨이 붙어있거나 유색 막걸리 병들도 함께 분리수거 되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그게 뭐예요?”
광주지역 대규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투명페트(PET)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무화됐음에도, 아파트 입주주민 대부분이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자치단체 등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실행·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제도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기껏 만든 정책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광주 지역 843개 아파트 단지(동구 89개, 서구 150개, 남구 133개, 북구 238개, 광산구 233개) 주민들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품질 페트병의 해외 수입(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7.8만t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의무 적용 대상으로, 150~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한다면 의무 실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내년 6월까지 제도 기간을 거쳐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의무화됐음에도, 광주지역 아파트단지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전혀 체크

할 수 없었다.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아파트 단지 및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전용 포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 한장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전용 포대를 제대로 공급한 게 맞느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분리배출제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기본적인 분리배출 공간마저 마련해놓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많았다. 자치단체, 환경부 등이 손을 놓고 있는 결과로, ‘정책 따로, 현장 따로’라는 말이 나올만했다.
쌍촌동 인근 8개 아파트 단지 중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할 공간을 만든 단지는 전무했다.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지문도 붙여있지 않아 앞으로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도 거의 없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금호쌍용아파트 입주주민은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 안내받지도 못했더니” “알았다면 지켰을텐데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안내방송을 하는 내용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용 수거포대가 아니더라도, 분리수거를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지만 수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시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수막·공지문을 붙여놓고 전용 공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다른 페트병까지 함께 수거하는가 하면, 비닐 라벨을 떼지 않고 그

대로 버려놓은 용기도 많았다. 음식물을 씻지 않고 그대로 버려놓은 ‘불상식한’ 입주주민들의 투기 행태도 여전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깨끗이 제거하고 압착한 뒤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이파크 입주주민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하는 사실을 엘리베이터 공지문을 읽고 알았지만 라벨까지 떼어내야 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말했다.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함께 배출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철재 뚜껑이라면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투명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은 품목인데 그동안 다른 플라스틱·페트병들과 혼합돼 버려지면서 재활용이 낮았다”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아파트 의무화가 정착되면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규모 아파트도 내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법 권리당원 모집 혐의 정종제 전 부시장 집유 선고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은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판사 정지선)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정 전 부시장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 도시공사 임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리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한 점,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해 모집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을 준비했다”며 “다만 선거에 불출마해 당내 경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광주 민간공간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다가 입당 원서를 획득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정 전 부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마무리...선고는 내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우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행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는 내년 초 판가를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때리고 욕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제한... '올해의 10대 직장갑질'

시민단체, 사례 모아 발표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갑질
중소기업 사장 '갑질대마왕상'
월급 대신 마스크로 지급하기도

머리를 때리면서 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업무 외 잡일을 시키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사들의 비정상적 '갑질 행태'는 올해도 여전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직장갑질 사례를 모아 '2020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다. 올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849건 중 제보자 신원 확인을 거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모았다. 직장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도 상사의 직장 갑질까지 견뎌내야 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노동자들 바람이다.
직장갑질119는 수상 사례를 폭행·모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일부에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불었다.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이름이 붙은 폭행 부문에는 같이 차에 타고 있을 때 직원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퍼붓고 정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할 일 없어 퇴근했나? 그만두게 해줄게' 등 폭언을 한 회사 상사에게 돌아갔다.

'쌍육대상' 부문에 올린 회사 사장은 들고 있던 컵을 깨트리며 '여기 놀러와? 내 말이 X같냐? 왜 안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라며 협박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병 상대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붙은 '갑질지시' 부문에는 사장 소유 별장에 갑질하고 울타리 공사, 나무 심기, 저녁 만찬 등을 준비하도록 한 회사 대표가 꼽혔다.
'불법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름을 딴 원청 갑질 부문(조현민상)에는 근무시간에 자신의 차를 고치러 가면서 심심하다며 용역업체 직원을 동행하도록 하고 직원 뱀을 때 직접 채용에 개입하기도 한 공공기관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월급 지급이 어렵다며 '돈이 급하면 만들어 둔 마스크를 박스당 10만 원에 팔아서 돈을 쟁겨라'고 한 마스크 공장은 '황당무상' (황당 갑질 부문)을, '도난 방지용'이라며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들여다본 사례는 '흉처보상' (CCTV 감시 부문)을 수상했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10가지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송송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